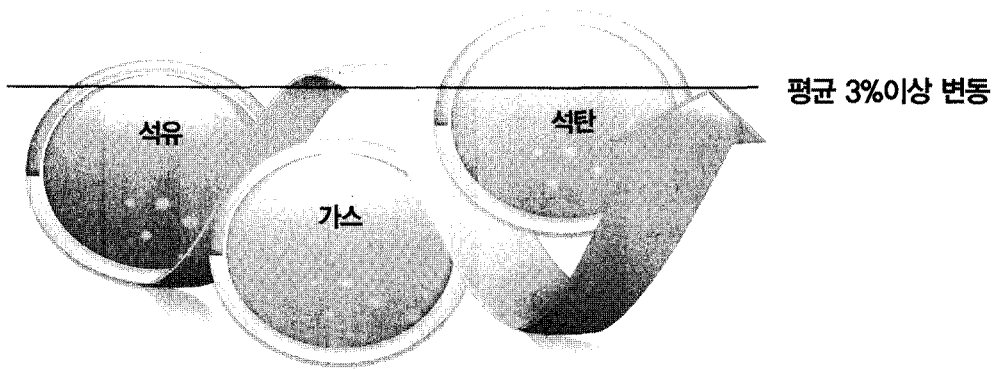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7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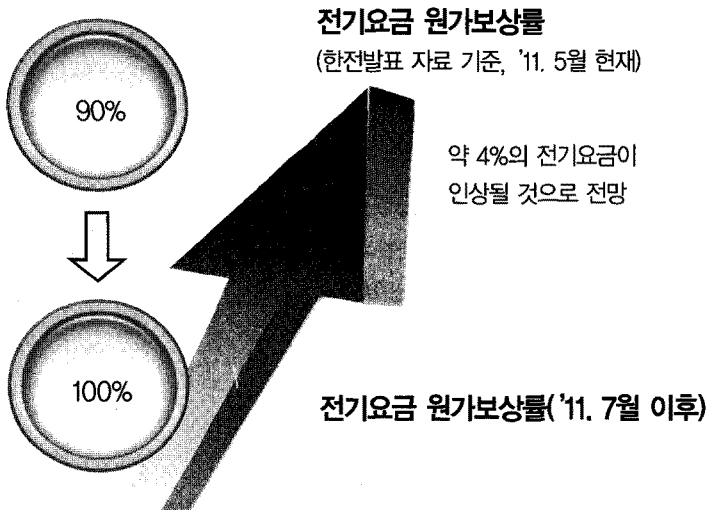
##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3개월 간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연료의 평균 가격이 과거 기준 연료비에 **3%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 ■ 추진일정(지식경제부)

'11. 6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로드맵 발표
'11. 7	기존 요금 결정방식 폐지 및 전기요금 연동제 적용



# 해상풍력 ·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 글로벌 파워엘리트 육성한다

- 지경부,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 세계 최고급 전문가 양성 위한 GET-Future사업 눈길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02-2110-5691)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에너지산업의 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1년도 에너지 인력양성 신규 지원사업' 을 5월 9일 공고했다.
  - ◎ 지경부는 이번 신규지원 공고를 통해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등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 새롭게 마련된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사업',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와 우수 인력의 해외 학위취득 지원을 위한 '해외장학사업' 등 13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학사 450명, 석박사 150명, 산업전문인력 3,000명 등 연간 총 3,600여명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여기서 "트랙"이란 기업의 시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학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경부가 지난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별도의 학과 신설 없이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들로 교과과정(트랙)을 구성하고, 기업이 인력양성 과정에 직접 참여(전문가 강의, 실습제공 등)함으로써 양성된 인력이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 이번 공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은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원천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사업이다.
  - \* GET-Future : 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 ◎ GET-Future 사업은 대학의 단일 연구실을 선정, 장기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파워엘리트를 육성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매년 2개씩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 그 첫해인 금년에 지원되는 분야는 '해상풍력' 과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Post LIB 화학전지)' 분야로 분야별 3배수의 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구실당 2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 ◎ 2단계로 2차년도에는 2배수로 연구실을 압축한 후 3년간 연구실당 연간 5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분야별 1개 연구실을 선정하여 6년간 연간 10억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부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석박사 R&D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등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에서 20여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 특히,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을 통해 전략응용·공통요소기술 분야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고급인력과 기술-인문-사회 등 학제간 협동을 통한 에너지 기술정책,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다.

- UAE 원전수주 등 수출산업화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기업의 수출마케팅을 돕기 위한 '수출연계형 인력교류사업' 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 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혁신하여 산·학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 또한, 배출된 인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력수급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산학간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2011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고하면 되며, 5.16~25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리드 EU시장, 표준으로 민간협력 채널구축

- 국가 표준코디네이터 첫 활동으로 獨·佛 협력 시너지 효과 -

문의 | 지식경제부 신산업표준과(02-509-7295)

-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유럽상공회의소(EUCOCK)의 적극적 협조하에 EU국가와 우리나라 기업의 각 특성에 맞는 민간 중심의 맞춤형 기술 표준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 이번 국제 협력의 특징은
    - ① 정부차원의 선연적인 국제 협력이 아닌, 기업이 주체가 되는 민간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으며
    - ② 이를 위해 현장감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첫 번째 활동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점이다.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R&D 결과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우리기술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율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활동에 전력하도록 정부가 임명한 민간전문가(스마트그리드 : 한국전기연구원 김대경 센터장)
  - ◎ 지난 4월 초 새롭게 임명된 스마트그리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는 포스코 ICT, 한국전력 등 15명의 기업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측업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표준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준대표기관 협력) 민간 기업들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간에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다.
  - ◎ 독일(전기기술위원회, DKE) :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보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협력
  - ◎ 프랑스(전기기술연합, UTE) : 스마트미터의 표준·보급 사업 협력
  - ◎ 글로벌 표준화 조율과 상호협조를 위한 韓-美-EU간 「표준 코디네이터 협력체」 구성 합의
- (민간협력) 韓, 獨, 佛 스마트그리드 업계는 상호간의 강점분야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채널 구축을 이루었다
  - ◎ 한국전력은 佛전력회사(EDF)와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포스코 ICT는 佛Schneider와 「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MoU 추진
  -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佛전기통신제어협회(GIMENLEC)와 「기술표준 정보교류 지원 및 협력사업 개발 등」에 관한 MoU 추진
  - ◎ 獨정보통신연구소(OFFIS)는 한국의 SG 정보통신·보안 분야와 국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 ◎ 프랑스는 자국 업계 대표단을 구성하여 5월말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관련기업과 구체적인 기술협력 논의 희망
- 이번 협력출장에 대한 평가로, 스마트그리드 시장·기술·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EU 주요 기업과의 협력 채널구축 지원에 대한 정부노력에 국내 관련업계는 호의적 입장이며
  - ◎ 獨, 佛업계는 IT 강국이고 신규산업 발굴에 적극적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협력으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
  - ◎ 한편, 기술표준원은 향후 국내 관련 업계를 위해 국가 표준코디네이터의 풍부한 노하우를 심분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주요시장으로 부각된 중국, 일본 등과의 전략적 기술표준 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표준 선점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  
- 에너지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신산업 창출 기대 -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4901)

-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 정보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손쉽게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4.29일(금),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정의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옴
  - \*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
  - ◎ 이날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
-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
  - ①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
  - ② 先 거점구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③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정보 : 실시간 전기요금, 시간대별·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
    - 한편, 異種 산업간의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을 권고토록 하여, 전력·IT·가전 등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도모
  - ④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
- 지정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를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 ◎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금년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
  - ◎ 또한,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
  - \*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 글로벌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정책의 개발과 도입 촉진을 위해 한·미·일 등 20개국간 협력 추진
-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에 조치강화

- 전국 793개소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30개소 입건,  
130개소 작업중지 조치 -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02-6922-0951)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일(수)부터 25일(금)까지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반 및 토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96.5%인 766소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 점검 결과,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개소는 형사입건 하였고
  - ◎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는 전면 작업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개소는 부분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 ◎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중지하는 한편, 3억8천여만원(316건)의 과태료와 2,7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였다.
- 적발된 현장 중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이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월19일(목)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보내면서 자칫 해빙기 대비에 대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산재 위험이 예상되는 건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 ◎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발주 전기공사에도 실적공사비 적용

- 조달청, 4월부터 플랜트 분야 등 429품목 적용 ... 물가안정 기여 -

문의 | 조달청 건축설비과(070-4056-7403)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4월 1일부터 전기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 《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

- ◎ 실적공사비란 :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
- ◎발표기관 : 지식경제부(한국전기산업연구원 관리)
- ◎발표현황 : 총 1,021품목
- ◎도입년도 : 2006년

- ◎ 그 동안 조달청은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실적공사비가 발표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 ◎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적공사비 기준이 발표돼 조달청은 내선·플랜트 분야를 비롯한 일부 변전 및 배전분야를 포함한 429개 품목을 선정,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표준품셈의 거품논란 및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및 시증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되도록 했다.
- ◎ 이와 같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병행해 적용한 결과 전기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약 7%정도 낮아지게 된다.

- 건축설비과 최종범 과장은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작업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용가격을 시설자재가격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 가격정보